

총탄 흔적·어린이 추정 유골 ... 5·18 암매장 가능성 '촉각'

옛 광주교도소 유골 40여 구 발견 ... 행불자 가족 DNA 대조
5·18진상조사위 빨리 출범해 암매장지 찾기 적극 나서야

1980년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수차례 지목돼 온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인근 무연고자 공동묘지 부지에서 탄흔으로 추정되는 구멍 뚫린 두개골과 어린이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5·18진상조사위는 "아직은 그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면서도 5·18 당시 행방 불명된 광주시민의 유골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5월 관계자들은 이번 유골 발굴로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에서, 출범을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행방 불명 암매장지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5·18기념재단과 법무부, 합동감식반, 오월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합장묘 1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곳 공동 묘지는 ▲ 1972년 5월~1995년 9월까지 조성된 것으로 기록된 개인 묘 50기 ▲ 합장 무덤 2기 (1975년 12월 11일 조성된 것으로 기록된 20구 합장묘,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있던 옛 광주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1971년 4월

21일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1구 합장묘) 등 모두 111구의 유골을 관리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곳에서 법 교 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 조성을 위한 무연고 묘지 개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신원 미상의 유골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법무부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관리기록에 따르면 개인 묘 50기와 20구가 공동으로 묻혀 있는 합장묘의 유골 숫자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41구의 유골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던 합장묘에서 8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40여구는 땅속에 만들어진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가로·세로 1m, 높이 1.5m) 안에서, 나머지 40여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를 덮고 있던 봉분 흙더미에서 나왔다. 유골이 묻혀 있던 봉분 흙더미는 지상에서 20cm 깊이에 불과했다.

지난 20일 국방부 유해발굴 조사단에서 1차 육안 감식을 한 결과, 두개골 2개에서 구멍이 발견됐으며 성인의 두개골보다 작은 크기의 두개골도 확인됐다.

일부 5월 관계자들은 두개골 구멍은 5·18 당시 총격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작은 크기의 두개골은 어린이 행불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두개골 구멍을 탄흔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두개골 크기가 작다

고 어린이 두개골로 봐선 안된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장된 두개골 수가 유골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미스터리다. 실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 두개골은 80개 중에서 1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5월 관계자들 사이에선 "잔인한 계엄군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사체를 분리 또는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합동감식반과 일부 5월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5·18 연관성을 속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봉분의 크기와 유골이 매장된 형태,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사건 이후 시신상태에서 묻혀 유골이 됐다기보다, 특정지역에 묻혀 있던 유골을 다시 옮겨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시멘트 유골함 위에 묻혀있던 유골들이 1975년 조성된 묘는 조건으로 묻혀 있던 다른 유골보다 부식이 심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보면, 1975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합동감식반의 설명이다.

한편, 국과수는 23일 합동조사반 및 5·18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감식 기법과 참관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5·18 행불자 유가족 DNA와 대조 작업을 거쳐 감식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유골 발견 옛 광주교도소 부지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법무부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유골 40여구가 발견됐다. 법무부는 5·18 당시 암매장된 행불자의 유골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5·18 탄흔일까? 지난 20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구멍 뚫린 두개골.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한전공대 법인설립 여부 해 넘겨 내년 1월 결정

심사위, 서류 보완 요구

교육부의 한전공대 법인인가 여부가 결국 해를 넘겨 2020년 1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교육부의 '2019년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나 소명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30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설립 여부는 인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는 30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에서 소명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계속 심의'를 결정하면서 한 달 연기가 가능해졌다.

설립지원단 관계자는 "3개월이라는 시간에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 1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1월 심사에서는 한전과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도 한전공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장림총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 7명·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인가결정이 나오면 한전공대 측은 인가를 낸 3개월 안에 이행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설립 등기서류, 재산확보명세서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학교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학교법인 인가가 나오면 이사회가 공식 출범하면 이사회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게 된다.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총장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고 교수·인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학설립 인가, 캠퍼스 건설 등 개교 준비 전반에 걸친 총괄책임 역할을 맡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오늘부터 '반값'

승용차 9400원→4900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작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 |
|----------------------|------|
| 굿바이 이세돌, 시와 대국 1승 2패 | ▶2면 |
| 30대 일용직 문지마 모델 병화 | ▶6면 |
| 한기주, 고교야구 지도자로 변신 | ▶20면 |

환영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40% 참여확정(2019.12.18, 당정협의 결정), 경전선 광주~보성~순천 고속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환영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공후식)는 어려운 지역건설업계의 일감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와 전라남도,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공공공사 물량확대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700여 회원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지역무의공동도급 적용과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크게 환영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에 건의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해당 부처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도지사가 직접 서신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 신안 압해~목포 울도·달리도~해남 화원 13.4km(5,005억 원)
 - 여수 화태~백야 11.7km(5,269억 원)
- 또한 호남의 숙원사업인 남해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서 도의회(의장 이용재)와 언론인 등 도민 170여명과 함께 목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열차탑승을 체험하였으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노력하였습니다.
 -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고속전철 82.5km(1조 5,228억 원)
 - 경전선 광주~보성~순천 개량 및 고속전철화 122.2km(1조 7,703억 원)
- 이에 우리 협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인력고용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 12. 23.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공후식 회장 및 회원 일동